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1년 6월 2일(수) 오후2시-4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 강은미
정의당 노동위원회
금속노조 · 사무금융서비스노조

프로그램

사회 김응호 부대표

발제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증언

금속노조

채봉석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장

오해진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

온명근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윤준호 경주지부 다이셀지회장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지회장

제안

권오진 금속노조 정책부장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방향

종합토론



P/R/O/G/R/A/M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21년 6월 2일(수) 오후2시~4시
-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강은미, 정의당 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내용	비고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사회: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인사말 (10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사무금융서비스노조 황복연 부위원장 (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
발 제 (25분)	외투기업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나원준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증 언 (각 사업장 10분)	① 금속노조 - 채봉석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장) - 오해진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 - 온명근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 윤준호 (경주지부 다이셀지회장) ② 사무금융서비스노조 -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지회장)
제 안 (15분)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방향 - 권오진 (금속노조 정책부장)
종합토론 (10분)	자유토론

C/O/N/T/E/N/T/S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3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5
정의당 부대표 김응호	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이재진	9

발 제

외투기업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1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증 언

① 금속노조

채봉석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장	41
오해진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	53
온명근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57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61
윤준호 경주지부 다이셀지회장	64

②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지회장	68
-------------------------	----

제 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방향	73
권오진 금속노조 정책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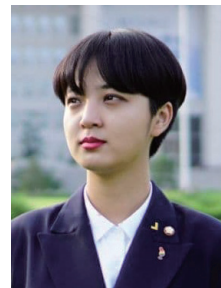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 사 말



인사말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외투기업 ‘먹튀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의 대사입니다. 참 뼈아픈 말입니다. <송곳>의 배경은 프랑스계 유통업체입니다. <송곳>에 나오는 프랑스 회사 푸르미 마트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를 대접해 주는 곳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한국에서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웹툰의 상상력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외투기업의 노동환경은 고액임금과 복리후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수평적 조직문화 등 세련된 모습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체불, 노조탄압 등 심각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투기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8%씩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562개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국내 매출의 10%,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은 국내 기업과 달리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만 누리고 고용 유연화 전략 구사,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투자 불이행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외투기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주요이슈는 외투기업 철수와 관련한 일자리 문제입니다. 외투기업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사업을 철수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의 몫입니다. 외투기업의 일방적 자본 철수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외투기업의 '묻지 마 폐업' 문제와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외투기업 '먹튀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산자부가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산자부 장관은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재난을 핑계로 한 사태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외투기업 '먹튀 행위'가 어떻게 현장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증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경주지부 다이셀지회, 사무금융서비스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 노동자분들의 목소리가 산자부에 제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또한 외투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오늘 발제를 맡아준 나원준 경북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를 해주실 금속노조 권오진 정책부장님 고맙습니다.

외투기업들이 막강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묻지 마 폐업 등을 추진하며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외투기업이 특혜만 누리고 노동기본권과 고용책임에 대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서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해 외투기업 '먹튀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인사말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작년 여름 이곳 국회에서 열렸던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지나 증언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국적기업의 무책임한 국내 경영 문제는 악화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다국적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을 통해 국내에 외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 실제 향유하는 혜택만큼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 기업은 국내법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누리면서 본사로부터의 기술 이전보다는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또는 정보 유출 등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경영이 성업일 때는 그 이익을 본사로 보내고, 경영 성과가 악화할 때는 그 어려움을 정리하고·임금 삭감 등으로 국내 노동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또한 노조나 국내 여론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면 과감하게 폐업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사업은 접고 해외로 돌아가는 흔히 ‘먹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증언을 위해 참석하신 한국계이츠지회, 한국산연지회,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다이셀지회, JT친애저축은행지회 모두 위에 언급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외국인 기업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임하는 사이 국가 세금만 외국 기업에 퍼주고 노동자인 국민은 고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국내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는 받으면서, 이익공유 없이 고통 분담만 요구하다 무책임하게 폐업하고 떠나버리는 외국인 기업의 횡포가 더 이상 묵과되어는 안 됩니다. 현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 증언대회가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중히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수)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인사말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정의당 부대표 김응호

정의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오늘 증언대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기업의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양하고, 고용문제 해결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대안 모색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노동조합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외투기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하고 있는 류호정 국회의원, 중대재해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실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의 주 내용은 시기적으로 달리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거 IMF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 제정 이후의 논란은 주로 세제혜택을 비롯한 특혜 지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서는 노동조건의 후퇴, 기술의 유출과 자본의 먹튀 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나 제도 보완과 대안은 불안정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효과성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안타까울 정도로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유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전무 해 보입니다. 외국자본의 투자 근거가 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내에서 노동조합, 노동권, 근로기준법 등의 문구는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표현은 아예 없을뿐더러 근로자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도 투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증언대회가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의 요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먹튀자본은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해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손 내밀 기관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 할수 있는 방안 하나 짚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증언대회에서 나온 노동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정의당이 책임 있게 나섭시다. 더불어 법률 제정후 외자유치, 외투기업의 기업운영과 노동권 보호 측면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일(수)

정의당 부대표 **김응호**

인사말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스탠다드사, 일본방직 등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서 들어온 차관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수출산업공단 안에서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들어 사실상 외국계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폐기된 것은 바로 87년 민주화운동,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였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외국계기업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데, 말 그대로 투자 유치에만 집중되어 있지 노동자 보호는 아예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근거로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외국계기업들이 철수할 때는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먹튀' 피해를 방지하려면 외국계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철수를 막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무금융노조 JT저축은행지부가 이러한 '먹튀'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J트러스트는 JT저축은행을 인수 후, 지금까지 업계 최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악명 높은 노조탄압 등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대의 매각차익을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약탈적 사모펀드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몇몇 국가는 자본 철수 때 혜택 반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외국계 기업의 자본 철수 때 사전에 특별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투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 · 폐업 · 철수 때 법적 심사협의체를 구성해 그 사유가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자본은 초국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운동 역시 초국적인 단결을 필요로 합니다. 사무금융노조가 정의당과 금속노조와 토론회를 함께 하는 이유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만이 힘을 만들어 자본과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발제를 맡아주신 경북대 나원준 교수님과 증언에 함께 해주고 계신 투쟁사업장의 여러 동지들께 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일(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발 제

외투기업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나원준 |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외투기업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21. 6. 2.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목차

1. 정부 고용 대책의 검토
2. 외투기업 노동문제
3. 외투기업 폐업에 대한 고용 대책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5. 맺음말

1. 정부 고용 대책의 검토

3

■ 밀려오는 구조조정의 폭풍

○ 산업 현장에서는 구조조정의 폭풍이 코앞에 닥쳤음.

- 비대면 소비의 확산으로 대형마트들이 인력 감축과 매장 폐쇄, 부동산 매각에 나서며 구조조정에 내몰린 마트 노동자들. 대구에서 영주, 문경으로 강제 전환 배치되는 현실.
-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량 실직 위험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항공, 여행, 운수업종.
- 지금은 그간에 겨우 버텨온 제방이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때. 여태껏 어렵게 견뎌온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당장 붓물처럼 터져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님. 쟁의 사업장은 앞으로 늘어만 갈 것이고 폐업도 속출할 것.

4

■ 밀려오는 구조조정의 폭풍

○ 현대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잡으면서 전국의 수많은 하청 부품업체들 운명도 함께 결정되는 상황.

- 2021년 들어 현대차에 납품하는 차체부품 제조기업인 우영산업이 1월에 정리하고 기준을 공고한 사례. 우영산업과 세진 등에서 특별단체교섭 등을 통해 상여금 유보, 전환 배치, 순환휴직 등 합의.
-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일찍 **작년 7월에 이루어진 외투법인 한국게이츠의 공장 폐쇄가 자동차 부품업계 구조조정의 진정한 신호탄**: 현대차의 방관이 많은 것을 설명.

5

■ 당면한 고용위기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해소 어려울 전망

○ 당면한 고용위기는 여러 요인이 중첩되면서 해소가 쉽지 않음.

-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침체 및 소비패턴 변화, 세계경제의 예측 불가능한 전개 양상, 감염 확산 및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불확실성.
-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된 요인의 누적된 효과: **기술 전환과 무인화, 비대면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 향후 방역이 성공을 거두고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 요인에 의해 고용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큼.

○ 특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외투기업의 이탈 압력** 가중.

6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 디지털과 친환경으로의 기술 전환은 이미 우리 사회 일자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

- 기술 전환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는 주로 비정규직과 불안정 플랫폼 일자리 중심으로 창출 : 일자리의 질 저하와 양극화 심화.
- 기술 전환은 대량의 일자리 파괴 위험을 내포하기도 함.

7

■ 기술 전환이 몰고 올 노동의 위기

○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다시 노동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동화가 더 용이해지고 부품을 부분장치로 결합하는 모듈화가 촉진됨으로써 조립 공정이 단순해지기 쉽고 이는 인력 소요를 줄일 것.
- 현대차의 경우 2030년까지 인원의 60%를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 그 낱 나온 것이 아님.
- **완성차 업체의 정규직 일자리가 무노조 모듈 공장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어갈 전망.
-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과 같은 하청 노동자들의 '스웨트샵'이 미래차 산업의 전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음.

8

■ 기술 전환이 몰고 올 노동의 위기

○ 그러나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해법은 조직 노동의 참여를 이끌어 낼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 독일의 '국가 전기차 플랫폼'처럼 **금속노조가 제도적으로 전기차 정책의 방향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보장되어 있는지 의문.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기술 전환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빠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는가?
- 노동시장의 조절 기능을 담당할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역할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칭적인 현실 : **사용자에게 편향된 논의 구조, 친노동 반노조라는 위선적인 정부 태도**는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이에 따라 일자리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어려움.
- 그 빈틈이 결국 대기업 자본의 영향력으로 메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위기는 또한 노동의 정치적 위기.

9

■ 정부 고용대책은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로서는 크게 미흡

○ 고용유지 관점에서 제조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밑그림이 없음.

-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대책에는 이른바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포함되어 있음. 전기차가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정부부터 마치 현대차의 새 사업을 홍보하는 외양.
- 그러나 **자동차 산업 재편이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하청 부품업체들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대책 부족.**

○ 정부의 역할은, 기술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 협력을 끌어내는 것.

10

■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조율된 고용 조정의 요건

○ 기술 전환의 과도기에 고용 충격을 관리하고 노동의 참여 속에 조율된 고용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제품 생산에서 분리되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공정에 전환 배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에 집중 ⇒ 독일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전환을 위한 단축노동임금'

○ 요건 ①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충고용을 방어

○ 요건 ② : 직무 전환을 위한 재교육

- 정부(와 사용자)는 내연기관 부품업체와 관련해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운용할 노동자들의 인적 자원에 투자해야. 이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것.

11

■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조율된 고용 조정의 요건

○ 요건 ③ :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 노동시간과 함께 줄어드는 임금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으로 보전해야.
- 이는 기술 전환이 공정한 것이 되기 위한 조건.
- 이는 또한 기술 전환의 과정에서 유효수요가 위축되어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기도.

○ 민주노조 운동의 대안 모델을 제시해야 함.

- 광주형 일자리를 발전적으로 극복.
- 외투법인 완성차 3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폭스바겐이나 르노 본사의 소유 지배구조를 참고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12

2. 외투기업 노동문제

13

■ 최근 한국게이츠 사례

○ 블랙스톤과 사측

-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의 분석 : 2018-2019년의 경우 현금성 세후 영업이익(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차감하고 감가상각비 더함)이 2년 합산으로 130억 원 이상, 설비투자는 2억 원, 배당은 110억 원 ⇒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익 재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자금 여유가 생기면 사실상 이를 그대로 블랙스톤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음.
- 사측은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이는 종전 ERP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는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
- 대구공장은 폐쇄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한국 땅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발주처를 대상으로 버젓이 사업 영위.
- 로펌을 앞세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가압류.

14

■ 최근 한국게이츠 사례

○ 현대차

- 당장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 안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초 코로나 초기에 중국 공장에서 납품이 끊어졌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수입을 통한 부품공급을 승인.
-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 수많은 내연기관 부품업체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
- 어쨌든 그간에 전속적인 납품 관계 하에서 현대차 완제품의 품질 관리에 기여해온 자국 부품산업의 1차 벤더를 버리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 ESG 선전은 그만 해야 할 것.

○ 대구시

- 무관심(해고 노동자들을 제대로 만나 주지도 않았음)과 무기력, 무능력으로 일관.

15

■ 정부의 외투기업 고용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

○ 외투기업 유치에만 치중해 그간에 여러 문제를 양산.

- 외자 도입 목적으로 정부는 외촉법 상 외투기업에 조세 지원,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20년에도 오히려 보조금 증액.
- 외투기업은 조세 혜택이나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생산 기지를 자유롭게 이전하려고 함.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의 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다 보면 자칫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음.
- 2002년 하이디스, 2005년 오리온전기, 2009년 쌍용자동차 등에서 반복된 최악의 기술유출 사례.

16

■ 정부의 외투기업 고용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

○ 외투기업은 지배구조 특성상 단체교섭으로 노사관계를 관리하기 어려움.

- 외투기업은 해외 본사의 지휘 통제 하에 있고 사용자 대표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제한적 : 사용자 대표는 현재의 사업장을 자신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일종의 경유지로만 인식 ⇒ 계속기업이라는 인식이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노조와 직접 대화를 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로펌을 통해 노조를 상대 : 단기적인 실적 달성을 위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부터 관심을 가지기도 하며 로펌도 고객의 이와 같은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

17

■ 정부의 외투기업 고용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

○ 외투기업은 지배구조 특성상 단체교섭으로 노사관계를 관리하기 어려움.

- 사용자 대표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교섭 당사자도 아닌 로펌을 상대해야 함에 따라 노조의 노력만으로는 신뢰 형성이 어렵고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실정 : 이는 외투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인 점에서 개선 안 될 것.
-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 기준이 열악한 점을 악용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경향. 자본 철수가 임박한 듯 협박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비일비재. 최근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만 골라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 사업장이 대구에 있었음.

18

■ 정부의 외투기업 고용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

○ 제도화된 고용 대책의 부재 속에 강제되는 **재산권과 생존권의 맞교환**.

- 다국적기업 본사의 자본 철수 결정으로 한국 사업장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화된 고용 대책은 없음.
- 일방적인 자본 철수는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어떤 제한도 없이 허용되는데, 그로 인해 노동자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음 : 이는 재산권과 생존권의 맞교환.
- 시민을 보호해야 할 (포용)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19

■ 뉴딜의 정신

○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헌법적 기본권

- 외투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폐업 결정은 어디까지나 영업 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 반면에 시민의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여전히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오늘의 현실**.
- 그 점에서 이 정부는 뉴딜이라는 말을 감히 써서는 안 될 것. 뉴딜을 이끈 대통령 루즈벨트의 철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업과 질병, 무주택, 무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확장하는 것(1944년 제2권리장전).
- 이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한국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는 민주노조 운동이 되어야 할 것.

20

■ 뉴딜의 정신

○ 현대기업의 공적 책임

- 아돌프 벌리와 가디너 민스는 저서 <현대기업과 사유재산>을 통해 (회사법이 규제하지 않는 영역에서) 현대 회사는 투자자와 노동자, 소비자의 주장을 고르게 반영해야 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공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 그것이 뉴딜의 정신이기도 했음.
- 외투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음. 이 점은 외출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방향성.

21

■ 사용자들의 자의적 폐업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사용자들의 자의적인 폐업 선택이 일자리의 대량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고의적인 폐업이라도 재산권 행사 행위로 정당화됨. 선제적 구조조정을 비롯한 **어떤 명분으로도 폐업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투기자본의 재산권 때문에 노동자 가구 수백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음.
- 그러나 노동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가 아무렇게나 쓰고 버려도 된다는 식의 주장이 어떻게 옳다고 하겠는가.

22

■ 사용자들의 자의적 폐업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폐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해 노동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고용 관계에 들어갈 때 평생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에서는 노사 간에 일종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볼 것.
- 상호간의 신의를 좇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노사관계의 중요한 바탕이며 궁극적으로는 회사 경쟁력의 원천일 수도 있음.
- 그런데 사측이 고의적인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생존권이 위협당한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고 볼 것.

23

■ 사용자들의 자의적 폐업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폐업은 정리해고와도 요건 상에 차이가 있음. 근기법 24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폐업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조차 없음.

○ 폐업은 자본이 자신의 가장 잔인한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

- 폐업은 일부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것.
- 사용자들은 노동법 상의 어떤 책임도 폐업을 통해 사실상 마음대로 벗어던질 수 있음. 폐업 결정에는 노동기본권이 들어설 여지가 아예 사라짐.
- 법적으로는 막을 도리가 사실상 없음. 해외에서 물량을 들여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등 사정으로 외투기업 자본 철수에 맞선 노조의 투쟁이 성공하기는 힘든 현실.

24

3. 외투기업 폐업에 대한 고용 대책

25

■ 종합적인 외투기업 고용 대책의 제도화가 필요

○ 이 땅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노동기본권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

○ FTA 자유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 등 실정법의 불가피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철수가 가져올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사전적인 투자 제한
- 사전적인 고용 보호 장치
- 송금 한도
- 노동이사제
- 폐업 대응 및 추징 환수

26

■ 사전적인 투자 제한

○ 미국의 엑스 플로리오 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성

- 국가나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음.
- 고용 위기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는 어려운 특징.
-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점을 균형 있게 감안할 필요.** 한미 FTA를 찬성했던 전경련이 당시 외국인 투자규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27

■ 사전적인 투자 제한

○ EU의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 Directive의 사전 투자 제한과 관련된 사항

- EU의 Directive는 회원국 각국에서의 입법을 위한 지침으로서 Regulation에 다음 가는 규제력이 있음.
- 동 Directive 제15조 제4항에서는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각 대체투자펀드별로 **레버리지의 최대한도**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박영윤, <유럽증권법>, 박영사).
- 이를 외투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에 적용하면, 최초 심사 단계에서 사전적인 투자 제한을 위한 인수자격요건으로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수준을 포함시킬 여지가 있다고 볼 것.

28

■ 사전적인 투자 제한

- 한편 이와 관련해 2020년 대법원이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LBO에 대해 배임죄 유죄로 판결한 것도 참고.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LBO, 즉 피인수기업이 인수자의 인수대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는데, 최근 법원의 태도는 이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그렇다면 사모펀드의 LBO를 근거로 인수자격요건을 제한해도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법률적 검토 필요.

29

■ 사전적인 고용 보호 장치

- 사전적인 고용 보호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FTA 등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함.
- 국내기업이 고용안정기금 조성 의무가 없을 때 외투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
- 그러나 외투기업 대상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이를 기존의 세제 상 혜택 등과 연동시키는 조치는 도입할 수 있을 것. 혜택을 더 줘야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
-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은 유사 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거쳐 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아울러 최초 투자 단계에서 고용안정 저해 요건을 외측법 제4조 2항 투자제한 사유로 포함해 사전심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필요.

30

■ 송금 한도

○ 배당이나 본사 송금에 한도를 두는 것은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임.

○ 그러나 앞서 언급한 EU의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 Directive에서는 투자대상 회사 보유 자금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동 Directive 제3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음 :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대체투자펀드의 관리회사 또는 발행자는 당해 경영권 취득일로부터 24개월 간 배당, 감자, 주식상환청구, 회사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촉진, 지지, 지시해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경우 이에 찬성투표를 하여서도 안 된다.” (박영윤, 앞의 책)
- 이 규정을 근거로 하면, 외투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의 경우에 인수 시점부터 24개월에 준하는 기간 동안 배당이나 본사 송금, 유상감자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정당화될 수 있어 보임.

31

■ 노동이사제

○ 모범 사용자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외투기업부터 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 노동이사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외투기업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하겠음.

32

■ 폐업 대응 및 추징 환수

○ 20대 국회에서의 외촉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를 신고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장관이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으면 이를 명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

- 다만 실정법상 일반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을 폐업과 관련해 차별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움.
- 폐업에 대해 외투법인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서라도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음.

33

■ 폐업 대응 및 추징 환수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장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심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심의는 폐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되기 어렵고 지금까지 외투기업이 지원받은 혜택을 회수하는 제재를 중심으로 할 것. 관련 제재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
- 그러나 이 경우에도 FTA 등과 다투지 않는 범위 내에 현실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음. 그런 점에서는 지역 협의체에 의한 심의와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 혜택 회수 조치가 실제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필요.

34

■ 폐업 대응 및 추징 환수

○ 추징과 환수 규정의 대폭 개정 필요.

- 조세 지원에 대한 추징 규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 정도에서만 과세 특혜에 국한해 추징**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침.
- 그 밖의 현금 지원이나 입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사항.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이 조례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조례에 별도의 환수 조항이 없는 **규제 공백 상태인 경우도 있음**.
- 조세 지원에 대한 추징 규정을 재검토해야 함. 현금 지원이나 입지 지원에 대해서도 환수 규정을 **상위법으로 입법**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35

■ 폐업 대응 및 추징 환수

○ 폐업의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음. 외투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주주총회 전에 폐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폐업이 결정된다면, 이에 맞서 폐업 결정을 주주총회 전에 미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취약해지기 때문.

- 다만 폐업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해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한하는 방식의 접근은 가능할 수 있음.

36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37

■ 가이드라인의 개요

○ 외촉법 개정의 원칙은 최소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국제인권 규범, 국제노동권 규범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

• 규범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제3자가 판정하는 시스템.

○ 하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나라마다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위반 시에도 공적 제재가 없는 한계.

•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제소와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요구됨.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제소 기업의 반발을 사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곤란함이 있음.

38

■ 한국 현실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

○ 앞서 언급했듯이 실정법 상 폐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폐업 과정에서 국제기준인 OECD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 그나마도 한국 현실은 그것조차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제도 환경.

○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도 NCP를 두고 있음. 그러나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노동 관련 분쟁 대부분이 각하 또는 장기 미결 상태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 : 아사히글라스 사례.

39

■ 가이드라인의 제5항 고용 및 노사관계 조항

○ 기본 내용

- “기업은 노동자 대표에게 고용조건에 관한 중요한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 “**구조조정이나 폐업 시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며, 고용조건이나 노조결성 혹은 가입에 대해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40

■ 가이드라인의 제5항 고용 및 노사관계 조항

○ 다국적기업의 책임

- 사용자는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영상의 변화에 대해 노조에 합리적으로 통보해야 ⇒ 구조조정이나 폐업에 대해 합리적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노조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구조조정 및 폐업에 따른 부정적 고용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등 노조 및 정부에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해야 ⇒ 부정적 고용 효과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조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노조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구조조정 및 폐업으로 인해 부정적 고용 효과를 야기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 부정적 고용 효과를 야기하거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노조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1

5. 맺음말

42

■ 외자 유치의 그늘

○ 산업연구원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을 기준으로 할 때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성과가 나빴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서는 **외투기업의 사업 철수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

○ 외투자본이 기업을 인수해도 막상 선진기술의 이전은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여러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음.

○ 특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문제는 **단기실적주의** 경향. 외투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 치우쳐 경영자문, 로열티 등 명목으로 투자 초기부터 자금 회수를 시작하고 **이전가격을 조정하고 배당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수익의 공정 배분을 저해**함. 아울러 이윤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는 경향 또한 있음.

43

■ 과잉 축적의 동태적 비효율성

○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자본축적이 과잉인 관계로 동태적 비효율성이 큰 상태**. 전반적으로 외자 유치에 예전만큼 목말 이유가 전혀 없음.

○ 한국 제조업은 완제품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고도화하는 특징을 보임. 재벌 대기업이 자금 동원력을 활용해 최신의 대규모 설비에 투자한 다음 이를 최대치로 가동하는 것이 현재 산업 경쟁력의 근원. 이에 따라 노동 유연화에 사활을 걸어왔음. 사내하청과 외주화는 이런 산업 특성이 유지되는 한 추세를 바꾸기 어려울 것.

- 그 이면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는 대신 일괄 CR 특약 등 불리한 납품조건을 수용. 기업 부문 이중구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지는 맥락.

44

■ 과잉 축적의 동태적 비효율성

○ 비싼 자본 설비 중심의 과잉 저축은 이면에 소비 부족을 수반. 한국은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대비 자본 설비 규모가 크고 국민소득 대비 민간 소비가 작은 나라이며 구조적인 수요 제약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문제에 봉착. 요컨대 성장을 위해 외자를 도입하던 시대는 지났음.

45

■ 시민사회의 공정성 강조 시각과 접점을 확보해야

○ 외투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에 비례하게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

- 기존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외투법을 개정해 향후에라도 투자 유치를 위한 혜택은 고용 영향과 환경 영향을 평가해 의무 사항 이행 수준에 연동시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외투기업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 대표의 제대로 된 처벌 필요.

-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면서 로펌의 협조로 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며 적반하장으로 사업 철수 협박을 일삼는 태도.
- 기술 유출 문제, 물량 소량배정으로 인위적인 적자구조 만들기, 노조 와해 공작, 폐업 후 야반도주, 제품 생산보다는 부동산 매각 차익에 열중하는 등의 외투기업 행태.

46

■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 외투기업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 제고. **NCP 개혁으로 민주노총의 NCP 개입.**
- **외투 사업장 노조의 연합체** 구성 및 연대의 의제화.
-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노동운동단체들의 연대로 초국적 공동대응 모색.

47

■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 FTA를 비롯해 오늘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와 규범들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 현행 헌법과 자유무역협정이 수호하는 자유란 가진 자들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일 뿐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부인되고 있다는 사실. 그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 노동정치는 지속적으로 폭로해야할 것.
- 민주노조 운동은 사용자들의 고의적인 폐업 선택에 포기하지 말고 단결해 맞서야 할 것. 누구든 앞으로 제2의, 제3의 한국게이츠, 한국산 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투법인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

48

감사합니다.

49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증언

① 금속노조

채봉석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장)

오해진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

온명근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윤준호 (경주지부 다이셀지회장)

②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성대 (JT천애저축은행지회장)



금속노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의 문제점

채봉석 |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장

□ 사업장 개요

1. 게이츠는 1911년 설립, 본사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타이밍 벨트 류, 텐서너, 자동변속기 등), 산업용 유압 호스, 마이크로 벨트 등, 그 외에 월풀 욕조도 생산. 세계 30개국, 120개 공장, 15,000명 이상 고용한 글로벌기업.
2. 한국게이츠 주식회사는 한국법인인 평화산업 주식회사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 및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합작 투자하여 1989년 8월 12일 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3. 2002년 12월 13일 자로 평화산업 주식회사가 당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Nitta Corporation으로 양도한 결과, 2019년 연말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이 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49%를 소유. 2003년 총 발행 주식수의 48.2%에 해당하는 600,000주를 유상감자하여 초기자본의 상당분을 이미 회수.
4. 지난 21년 간 얻은 1041억원의 순이익 중 989억원을 배당해 해당 기간 배당 성향은 95.0%에 이릅니다.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포함해 지난 10년의 배당 성향을 계산하여도 91.7%에 달함. 배당 성향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장기적 사업 지속을 위한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

5. 게이트유니타코리아(이하 GUKC)는 2004년 한국게이츠의 주주인 The Gates Corporation가 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49%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 GUKC 설립 전에는 한국게이츠가 직접 현대차에 납품하는 구조였으나 GUKC 설립 후 지금까지 한국게이츠와 중국게이츠의 생산품을 GUKC가 완성차로 납품하는 구조. GUKC 역시 주주 배당 성향이 90%가 넘어감.

□ 공장 폐업 관련 주요 일정

1. 2020. 6. 26.(금) 09:00

-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 및 법률 대리인 등이 지회 임원 면담 요청.
- 면담 내용으로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 후 공고문 부착

2. 2020. 6. 30.(화) 12:00

- 한국게이츠지회 공장폐업 관련 투쟁선포식 기자회견

3. 2020. 7. 3.(금) 10:30

- 한국게이츠 코로나 핑계, 일방적 공장폐업 통보! 대량해고 반대! 투기자본 규탄! 노동자 생존권 쟁취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정의당 강은미 의원 참석)

4. 2020. 7. 6.(월) 14:00

- 세종시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면담(노조, 지부, 지회)

5. 2020. 7. 6.(월) 11:30

- 게이츠 본사 부사장 및 김앤장 논공 방문, 희망퇴직 안내 및 공고문 부착
- 희망퇴직프로그램을 제시하니 7월 20일까지 희망 퇴직할 것을 강요
- 7월 31일까지 퇴직자에 한 해 희망퇴직 실시

6. 2020. 7. 16.(목) 11:00

- 한국게이츠 일방적 공장폐업 통보! 집단해고 자행하는 투기자본 규탄! 노동자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와대 책임추구 및 농성돌입 기자회견

7. 2020. 7. 17.(금) 11:00

- 한국게이츠 흑자폐업/대량해고 한국게이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게이츠 대책위, 시의원,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대구시의회 토론회 개최

8. 그 외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공장 재가동 요청 협조문 발표

9. 2020. 11. 23(월)

- 서부지원 공장출입 가처분 결정으로 투쟁중인 조합원 공장밖에서 천막농성 돌입

10. 2021. 2월

- 회사측이 업무방해로 법원에 요구한 손해배상 가압류 결정으로 업무방해 일부에 대해 3억 5천만원 전조합원에게 가압류 집행함

11. 2021. 4. 21(수)

- 권영진 대구시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 진행

12. 2021. 5. 13(목) 14시

- 한국게이츠 폐업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 출정식 진행하여 대구시청 집중투쟁을 전개.

□ 생산, 제조시설 폐업의 문제점

1. 흑자기업의 일방적 폐업 결정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30년 흑자기업 특히 투기적인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생산공장 폐업 결정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음.

2. 한국게이츠(주) 외자기업의 이윤의 해외 이전

- 확인 가능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 21년간 순이익의 대부분이 주주배당의 형식으로 이윤의 해외이전이 진행됨.
-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 생산공장 폐업 결정은 투기자본,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이윤 창출과 국내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임.

3. 생산공장은 폐쇄하고 제품은 판매법인을 통해 더 큰 이익 창출

- 국내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를 불러오는 부도덕한 행위임.

4. 공장폐업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 한국계이츠와 관련 부품사까지 6,000여명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첨부 자료참조)

5. 위장폐업 및 추후 공장 재가동의 가능성 있음

- 국내 완성차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불량 및 부품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국내 대응이 필요함.
- 현재 직원을 전체 정리하고 추후 공장 설비는 축소, 유지하면서 국내 완성차 부품 공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6. GUKC(계이츠 유니타 코리아, 계이츠 영업 판매법인)와 한국계이츠 대구공장과 의 관계

- 한국계이츠는 대구공장에서 한국내에서 영업과 생산, 납품을 진행해 왔으나 2004년 현대자동차의 요구로 영업과 생산을 법인 분리함.
- 분리과정에서 대다수의 GUKC(영업판매법인) 구성원은 한국계이츠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하였고 일부직원은 양쪽에서 근무함.
- 대표이사가 한국계이츠와 GUKC에서 겸임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함.
-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요구로 법인은 분리되었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로 경영함.

7. 폐업 투쟁 과정에 발생한 법적 문제 발생

-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발생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법원에서 공장출입 가처분과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결정하여 부당함에 투쟁하던 해고노동자를 옥죄어 옴
- 회사측의 모든 법적문제를 김앤장 로펌에서 진행하였고 손해배상 가처분의 이의 신청을 재판한 판사가 2017년까지 김앤장 로펌에서 활동해온 판사로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예상됨.

□ 투쟁현황

2020. 6. 26일 회사측의 폐업 결정이 발표한 이후 투쟁

-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 등 선전전 진행
- 미국 대사관 앞 선전전 진행
- 국회 선전전 진행
-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선전전 진행
- GUKC 선전전 진행
- 전주 국민연금 관리공단 본사 선전전 진행
- 대구시청 집회 및 선전전 진행
- 대구고용노동청 선전전 진행
- 더불어민주당 선전전 진행
- 국민의 힘 선전전 진행
- 대구시내 주요거리 거점 선전전 진행
- 대구시 8개 전체 구·군청 주요거리 도보행진 진행
-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 6천명 서명 받음.
- 현재 대구시청 집중투쟁으로 천막농성 및 시청앞에서 선전전과 연좌농성 진행중임.

국정감사 주요 요청사항

□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일방적 공장 폐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

- 노동법상 해고에 관련해서는 부족하지만 1달 전 통보와 같은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고보다 더 심각한 폐업의 경우 현행법상 당일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 피해와 관련된 어떠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외투 자본의 경우 이미 국내의 수 많은 사례에서 투자금 회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전과가 있음. 그러나 여전히 외투 자본의 노동시장 분란에 대해 대비책과 대안이 전무한 상황.
- 한국계이츠 사례를 통해 흑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은 폐업 후 외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을 허용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증인 채택이 주요하게 필요함.
-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업체인 한국계이츠의 폐업을 사실상 승인했음. 국내생산 공장을 폐업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판매법인을 통해 납품받겠다는 승인이 어느 선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와이어링 하네스(차량용 전선뭉치)' 사태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역이 중단되는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운영되던 1차 협력 부품사를 폐업시키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외투자본 및 사모펀드로 인해 아직까지 한국계이츠 흑자폐업의 원인과 그 후속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김앤장 법률대리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본사의 폐업 결정 과정과 그 후속작업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증인요청 : 현대자동차 하인태 사장(국내생산담당)
현대자동차 최준혁 울산 부공장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홍준호 변호사(블랙스톤 대리인)
한국게이츠지회 채봉석 지회장
국민연금공단 000

- 예시)

2020년 2월에 한국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 와이어 스프링

와이어 스프링은 한국 중소기업들도 만들 수 있는 물건인데 왜 중국 공장의 것만 사용하나요?

- 비용의 문제

한국에 한국게이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 벨트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한국에는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이 있고 생산법인은 중국에도 있어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알고 계십니까?

- 부인할 수도, 그 경우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한국게이츠에 직접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국게이츠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에서 동일한 물량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부품사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추후 제 2의 와이어 스프링 사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 공장이 유지되는 것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2차 업체라서 모른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그 경우 현대차가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 필요

결론적으로 한국게이츠 공장 폐쇄에 대한 책임, 산자부 등 국가 기구의 역할과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 강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서면질문 + @)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이 총 얼마입니까?

국민연금 해외 투자 운용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블랙스톤에 지난 3년간(5년, 10년) 기금 운용액이 얼마나 되고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 하였습니까?

블랙스톤은 OECD 기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의 제조 공장을 폐쇄한 후 동일한 물건을 중국의 공장에서 수입하여 판매만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악화시키고 게이트에서만 130여명, 전후방 업체 5,000여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업의 공적 책임을 다 하는 곳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빼앗고 실질적인 교섭 없이 회사 경영진도 모르게 폐업하는 사업장에 운용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첨부] 한국게이츠 공장폐업 공고문

- 2020. 6. 26.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노동조합 임원 면담 요청, 그 자리에서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



DRIVEN BY POSSIBILITY™

제조 시설 폐쇄에 대한 한국게이츠의 입장

2020년 6월 26일 - 한국게이츠(본사 대구 달성군)는 금일부로 한국 내 제조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게이츠 본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 특히 대구 공장이 주력으로 삼아온 자동차 시장 내 사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당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검토에 따라 한국게이츠는 2020년 6월 26일부로 한국 내 제조 시설 폐쇄와 함께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한국게이츠와 대구 공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철수 및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게이츠 본사가 2019년부터 전세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게이츠 본사에서도 이번 결정 이전까지 수 많은 선택지와 대안을 고려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본 사안을 검토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업계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퇴직 및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한국계이츠(주) 사업보고서

년도	매출액(원)	영업이익(원)	순이익(원)	주주배당(원)
2019	86,087,912,648	6,162,580,481	4,541,148,158	0
2018	92,388,381,580	6,483,742,464	4,761,231,197	11,000,000,000
2017	100,437,769,952	9,422,177,142	7,756,644,996	0
2016	94,668,802,592	9,492,986,691	7,680,574,431	6,840,287,000
2015	91,939,490,252	8,682,721,012	7,163,247,634	8,581,623,000
2014	67,995,648,049	6,625,550,498	5,849,740,420	4,079,870,000
2013	77,692,136,406	10,007,879,562	8,703,101,935	8,351,551,000
2012	73,819,034,914	7,420,809,196	6,700,845,990	5,850,422,000
2011	72,139,741,299	8,382,049,154	6,942,050,930	12,096,000,000
2010	70,878,938,476	4,783,938,687	4,011,720,945	2,013,000,000
2009	60,201,450,623	-587,004,569	224,166,458	2,112,000,000
2008	62,460,096,289	4,186,563,658	973,464,409	486,876,000
2007	63,527,626,287	5,754,564,080	4,493,432,334	4,246,716,000
2006	58,500,816,366	4,462,983,248	4,246,472,209	4,123,236,000
2005	61,664,399,092	4,433,913,842	4,806,025,883	8,403,013,000
2004	71,548,673,439	6,029,933,599	6,374,823,918	7,868,671,000
2003	62,179,319,236	7,645,149,863	6,504,153,266	2,926,869,000
2002(2)	48,544,302,869	7,130,473,859	5,993,666,359	2,697,150,000
2002(1)	58,626,860,320	6,403,910,185	5,182,748,871	2,332,236,992
2001	29,356,956,953	-873,050,760	-1,893,682,923	0
2000	52,663,965,596	2,920,434,372	3,095,674,691	6,875,000,000
합계	1,457,322,323,238	124,972,306,264	104,111,252,111	100,884,520,992

* 2003년 유상감자(60만주. 주당1만원. 총액 60억원 주주 반환)

* 영업이익, 순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배당의 형식으로 해외로 유출

* 2019년 현재 자산 42,860,418,440원중 부채는 15,587,869,626원. 실재 공장 부동산 가격 등을 비교 하면 공장폐업으로 인한 500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길 것으로 예상.

[첨부] 게이츠유니타코리아(주) 현황 및 사업보고서

- 게이츠유니타코리아주식회사는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 및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합작 투자하여 2004년 1월 9일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자동차 동력전달 벨트류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회사의 보통주식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이 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49%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6,000백만원.

년도	매출액(원)	영업이익(원)	순이익(원)	주주배당(원)
2019	82,330,362,573	1,068,849,903	1,028,297,979	1,000,000,000
2018	86,795,798,504	2,513,749,244	1,961,931,530	2,000,000,000
2017	93,249,673,840	1,606,391,936	1,270,748,030	0
2016	101,609,059,068	-617,176,209	-478,914,697	0
2015	98,858,319,092	276,306,647	429,260,742	2,198,000,000
2014	80,811,728,495	712,835,116	101,373,234	3,465,000,000
2013	91,069,294,460	3,910,164,252	3,608,942,601	5,600,000,000
2012	89,322,192,412	3,800,884,707	3,643,675,040	10,821,840,000
2011	91,651,609,661	4,974,047,986	4,037,875,663	2,018,938,000
2010	97,274,779,384	6,924,660,663	5,906,860,536	2,677,950,000
2009	95,526,805,687	7,580,529,952	6,506,697,631	5,527,700,000
2008	98,674,159,826	3,747,587,292	1,557,005,256	700,652,365
2007	113,744,354,239	11,785,732,148	8,470,499,203	7,811,724,642
2006	104,539,653,454	12,778,400,692	9,455,542,947	6,667,683,647
2005	99,470,346,807	12,187,660,483	9,217,286,692	5,136,676,248
2004	82,942,037,042	6,445,380,827	4,924,968,978	0
합계	1,507,870,174,544	79,696,005,639	61,642,051,365	55,626,164,902

* 제 1 기 2004년 1월 9일(회사설립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설립이후 주주배당으로 556억여원은 한국게이츠(주) 수익으로 발생하여야 할 금액을 판매법인으로 통해 이윤의 해외 유출.

[첨부] 협력업체 직원

NO.	업체명	업종	종업원 수	비고
1	한국엔에스케이(주)	가공	623	
2	지엠비코리아(주)	가공	586	
3	(주)에나인더스트리	사출	520	대규모 피해 예상
4	원태다이캐스팅	주단조	380	대규모 피해 예상
5	(주)선일다이파스	주단조	352	
6	주식회사 세원	프레스	268	대규모 피해 예상
7	대한소결금속(주)	주단조	228	
8	레이캡코리아(주)	하드웨어 단조	196	대규모 피해 예상
9	동양산업(주)	주단조	187	
10	(주)대용	주단조	142	
11	(주)엠에이텍	프레스	141	대규모 피해 예상
12	주식회사 오리엔트정공	가공	137	
13	(주)글로스코	주단조	127	
14	(주)민영산업	주단조	125	
15	평화씨엠비(주)	배합고무	118	대규모 피해 예상
16	(주)나우산업	주단조	117	대규모 피해 예상
17	생고뱅크코리아(주)	프레스	105	
18	(주)대구정밀	가공	93	대규모 피해 예상
19	인성엔프라(주)	사출	92	
20	(주)에이피엠	주단조	83	
21	(주)대원산업	도금	82	
22	한일산업(주)	도금	79	
23	정원금속(주)	하드웨어 단조	79	대규모 피해 예상
24	(주)신한정밀	주단조	78	대규모 피해 예상
25	부강스프링	기타	66	
26	경보산기(주)	가공	60	대규모 피해 예상
27	(주)케이피티유	열처리	60	
28	미래씨텍(주)	고무	55	
29	(주)코텍지오메트	도금	49	
30	일성정공	사출	48	
31	(주)한일 FORGING	주단조	46	
32	(주)삼오테크	배합고무	45	대규모 피해 예상
33	(주)대호	가공	43	
34	유성테크	프레스	42	대규모 피해 예상
35	삼화전착	도장	41	대규모 피해 예상
36	삼일금속(주)	탈수소취성도금	39	
37	성광도금	도금	37	
38	(주)서울에프엔디	하드웨어 단조	37	
39	보성열처리	열처리	35	
40	상성산업	사출	35	
41	서룡정공	가공	33	대규모 피해 예상
42	위너텍	도금	28	
43	남신산업	탈수소취성도금	27	
44	갈릴코리아(주)	도금	25	
45	광진금속	도금	24	
46	(주)삼미전착	도장	21	
47	영풍산업	탈수소취성도금	21	
48	도우산업	도장	20	대규모 피해 예상
49	(주)원텍	단순조립	20	
50	(주)진영정공	도장	18	대규모 피해 예상
51	원창산업사	도장	11	대규모 피해 예상
합 계			5,924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투쟁 현황과 진행 상황

오해진 |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

1. 현황 및 투쟁 경과 보고

1) 현 황

2016년 산켄전기는 생산부 폐지라는 명목하에 생산직 사원 전원을 정리하고 하였음. 정리하고 투쟁을 진행 하면서 한국투쟁과 일본투쟁을 병행 하면서 2017년 6월 원직 복직을 하였습니다.

산켄전기 본사는 저희를 원직복직을 시키면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다하겠단다는 내용 입니다 복직이후 LED조명 전원을 생산 시작하였습니다.

복직후 3년간 산켄전기 본사는 복직 합의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부분휴업을 반복하면서도 기계 생산설비 투자가 전혀 단 1%도 없는 빈껍데기 공장 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산켄전기 본사 홈페이지에서 LED사업의 철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문건에서 산켄전기 본사는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산켄전기 본사는 한국산연 지회를 속이고 EK(구. LG지흥)을 IBKS세미콘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 100%를 인수 후 한국에서의 생산 가동을 준비했습니다

산켄전기 본사의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생산품을 포함하여 생산을 하여왔습니다.

산켄전기 본사와 EK(구. LG지흥)제품생산이 특수 관계라는 표현을사용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무상태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7일 휴업에 대한 고용위원회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임금 100% 7월1일~7월31일까지 휴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한국산연 단체협약을 준수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 노사 3인으로 고용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8일 4차 보충교섭을 진행
- 2020년 7월 9일 일본산켄전기본사 홈페이지에 한국산연의 해산및 청산을 결정 한다는 내용을 발표
- 사측에 확인 결과 모르는 내용 이라고함.
- 바로 사실관계 확인 및 사장면담 및 교섭 요구.
- 2020년 7월 13일 한국산연 해산 및 청산결정 철회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시작
- 2020년 7월 15일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고용위원회 개최 고용위 개최 이후 당일 15시 폐업 및 근로관계 중지 공고(2021년 1월 20일),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
- 2020년 7월 16일 전체 조합원 각 가정으로 내용증명 발송
 - 2020년 8월 06일 2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특별 조기퇴직을 8월 20일경 실시 예고했었고, 교섭 속에서 “한국산연의 해산 및 청산의 책임은 한국산연 지회에 있다.”

“16년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산켄 공장은 살아남았을 것이다.”라고한국산연 대표이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급속노조를 없애겠다는 목적을 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8/27일 3차 고용 안정위원회에서 사측은 조기특별퇴직제도에 관한 사항이 정리 되었고 공고를 해서 시행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사측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측은 지회의 반대에도 강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했었지만 조기특별퇴직제도에서는 투쟁에 결합할수 없는 산재조합원 1명만 신청을 했으면 나머지 16명의 조합원은 해산 및 청산결정 철회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투쟁 경과 보고

2-1) 2020년 07월 13일 ~ 9월 까지

- 7/13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돌입
- 9/9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 결성
- 부산영사관, 서울산켄코리아, 노동부 난장투쟁, LG1공장 난장투쟁, 서울 일본대사관, LG트윈타워 투쟁
- 금속노조 국제국을 통한 항의 공문 발송
- 금속노조 국제국을 통해 일본 연대단체 지원 요청 공문 발송
- 수출관리원 관리원장 면담, 노동부 지청장 면담
- 2021.05.13. 경남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 2021.05.17. 사측의 명도소송 취하됨을 확인

2-2) 일본 연대단체 지원투쟁 경과 보고

- 2020년 7/18, 7/31, 8/17 3차례 화상회의 진행
- 7/21 일본 레바넷 TV를 통해 한국산연 투쟁상황을 알림
- 7/29 일본 연대단체 자체 선전물 배포
- 8/20 일본 본사 앞 규탄 집회, 시키역 앞 규탄 선전전
- 8/21 본사가 있는 사이타마현에서는 한국산연을 지지하는 사이타마 시민모임이 결성
 - 9/3 도쿄에서는 한국산연을 지원하는 모임을 100여명이 넘는 규모로 발대식을 개최/ 매주 월 사이타마 시민모임 본사 타격 투쟁, 목요일 산켄전기 본사 항의 투쟁
- 21.04.03 한국 산켄 노조를 지원하는 오사카 시민의 모임결성 및 오사카 산켄영업소 항의 투쟁
- 21.05.10 일본 사이타마 시민모임 연행자 발생

2. 투쟁 목표 및 방향

- 해산 및 청산 계획 저지를 위해 청산인 사퇴 투쟁을 해서 일본 본사가 직접 교섭을 나서게 하여 한국산연을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만들어 낸다.
 - 외투기업의 횡포와 무차별적 철수를 막을수 있는 법제화.
 - 법제화 투쟁속에서 민주노총, 진보정당, 국회의원, 경상남도, 창원시와 연대하여 조례제정을 만들어 내는 투쟁
 - 시도의원 5분발의, 조례제정
 - 경상남도 창원의 행정 사무 감사때 한국산연 문제 요구
 - 창원시 행정감사(시장면담요구), 사장 면담요구
 - 일본산켄전기(본사), 일본 노동성, 일본 외무성 항의공문 요구
 - 산연문제 해결을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양대노총 천인선언, 릴레이지지선언(사태해결과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등)
 - 국회의원 : 외자기업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수출자유무역지역 같은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사업장의 무차별 철수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철수 사유와 명확한 자료 공개, 특별세무감사를 요구.
-
-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에게 한국산연 사태에 대한 상황과 요구서한 전달
 - 20년 12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인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주식회사와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에 공동서한 발송
 - 20년 12월 30일 경상남도 도지사, 창원시장, 경상남도 시의원 및 도의원들의 항의서한을 산켄전기 본사, 일본 후생 노동성, 경제 산업성등에 서한 발송
 - 21년 1월 8일 한국산연 대책위를 비롯한 150여개 시민 사회단체의 항의서한을 산켄전기 본사, 일본 후생 노동성, 경제 산업성등에 추가 서한 발송
 - 21년 1월 20일 인터넷으로 한국산연 폐업됨을 확인, 사측 단전 단수 시행, 일방적 해산 및 청산 반대 와 이후 투쟁 결의를 위한 삭발식 진행
 - 주 1회 서울 집중 투쟁(산켄전기 코리아, 일본 대사관, LG 트윈타워)
 - 매일 서울 거점 1인시위
 - 요일별 난장 투쟁 및 매주 목요일 집중 투쟁

금속노조

한국 GM

온명근 |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1. 글로벌 GM의 경영전략과 한국 GM의 미래

글로벌 GM의 경영전략은 플랫폼화와 수익성 중심으로의 사업재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플랫폼화에 따라 본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자회사 간 생산 이전이 용이해진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생산 물량 유지를 위한 자회사 간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생산시설 유지를 빌미로 노동 조건의 양보가 강요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 한국, 호주 등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서 각 지역에 맞는 생산을 통해 ‘점유율 확장’ 전략을 추구하던 GM은 2014년 메리 바라 취임 이후 이를 경영에 있어서의 재무적 원칙을 강조하는 ‘수익성 추구 우선’ 전략으로 전환한다. 유럽 사업 철수, 북미 트럭 시장- 중국 시장- 고급차 시장 을 중심축으로 한 사업 전망 확립 등을 통해 이 새로운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GM은 생산기지들 사이의 경쟁에서 수익성 우위를 보이지 못하거나, 미래 계획에 속하지 못한 해외 공장들을 지속적으로 폐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폐쇄 결정 직전까지도 지속적인 생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던 중 기습적으로 폐쇄를 발표한 후, 폐쇄 이후 후속 조치만을 협상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노동조합은 폐쇄에 대응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는 2021년 4월 16일 이메일을 통해 1419명의 노동자 전원에 대해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던 인도 푸네 탈레가온 공장의 최근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 군산공장 폐쇄 사례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한국 GM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에서 2018년 1월 11일 날짜로 미래발전전망과 관련하여 미래 생산 및 투자 관련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히 2018년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여 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킨 이후, 2018년 2월 13일 바로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

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단체협약 상 '노조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간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2월 13일 통보로부터 90여일이 흐른 5월말 군산공장 폐쇄 결정 자체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이후 후속 조치들만이 논의 되었다. 이후 부서들을 특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희망퇴직으로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가운데, 2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700여명의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급휴직의 고통을 겪었다.

이후 2019년 인천부품물류센터가 폐쇄되었으며, 올해 3월 창원부품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사업소 폐쇄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왔다. 창원과 제주에 대한 폐쇄 과정 역시도 단체협약에서의 합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인 통보의 형태를 띠면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에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3. 투자계획과 생산성 연계 문제

2021년 4월 22일 한국 GM 경영현황설명회에서 경영진은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계획 요구에 대하여, 뛰어난 경영성과가 증명되어야만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표로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언급되었다.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연계하여 인력 배치 유연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각종 생산성 지표를 명시적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 역시 물량 유지를 매개로 해외 자회사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었던 GM의 경영 행태에 부합한다. 한국 GM 경영진은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이 본사에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조건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향상된 생산성 달성이란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한편, 과거 10여년간의 손익계산서를 보았을 때, 한국 GM의 낮은 수익률은 대략 80% 선에서 형성되는 국내 타 완성차업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에 기인한다.

[그림 1] 손익계산서 주요 재무비율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매출액	8,497,518	8,453,784	9,167,159	10,797,758	12,234,155	11,937,154	12,918,197	15,603,937	15,949,675	15,068,001
매출원가	8,125,804	7,965,147	8,452,529	10,389,688	11,396,103	11,524,903	11,875,539	13,529,077	15,105,356	13,699,886
매출원가/매출액(%)	95.6	94.2	92.2	96.2	93.1	96.5	91.9	86.7	94.7	90.9
판매관리비	688,602	819,111	1,337,326	1,263,290	1,369,208	1,006,648	1,191,224	988,381	1,184,594	1,254,423
판매관리비/매출액(%)	8.1	9.7	14.6	11.7	11.2	8.4	9.2	6.3	7.4	8.3
영업이익(손실)	-316,888	-330,474	-622,696	-855,220	-531,155	-594,398	-148,566	1,086,479	-340,276	113,692
영업이익/매출액(%)	-3.7	-3.9	-6.8	-7.9	-4.3	-5.0	-1.2	7.0	-2.1	0.8

(단위: 백만원)

그런데 한국 GM의 경우 높은 매출원가의 원인을 급여로 설명하기 어렵다. 매출액에서 중 종업원 급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도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이 비율은 2020년대 후반 들어 구조조정 및 노동조합의 양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매출원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GM 사측의 경우 고용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미래투자계획을 수익률에 연동시켜 노동비용절감을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림 2] 종업원급여/매출액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매출액	8,497,518	8,453,784	9,167,159	10,797,758	12,234,155	11,937,154	12,918,197	15,603,937
종업원급여	756,845	691,767	1,023,748	1,531,039	1,568,574	1,550,027	1,492,621	1,363,515
급여/매출액(%)	8.9	8.2	11.2	14.2	12.8	13.0	11.6	8.7

[그림 3] 한국 GM 임금인상률 및 성과급 (2011~20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인상률(%)	4.7	5.4	5.0	3.3	4.2	3.9	2.3	0.6	-	0.5
성과급(백만원)	7.0	9.0	10.0	10.5	10.5	11.0	10.5	-	-	4.0

4. 이전가격 문제 및 산업은행의 감시 역할 문제

한국 GM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 역시 2019년 회계연도부터 GM아시아퍼시픽지역 본부 주식회사와의 로열티 계약을 통해 지불하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줄어들었다.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매출원가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이전가격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2018년 한국 GM에 대해 7억 5000만 달러를 출자하였으며, 1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여 2대주주의 지위를 점한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한국 GM의 높은 매출원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상태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한국 GM측의 비협조로 조사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었다. 한편, 이미 2018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한국 GM에 대해 22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2020년 한국산업은행은 2018년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GM은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으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또한 한국 GM이 국세청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건이, 200일 정도의 평균적인 처리기간을 넘어서 2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 GM은 2018년 기본 협약에 따라 28억 달러의 회전한도대출 지원을 약속하며,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한국 GM에 배정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차입은 지난해 말에야 한번 이루어진 데 불과하다. 그리고 이 차입 조차도 2021년 2월 26일 수개월만에 바로 전액상환 되었다. 시설 투자에 활용하는 회전한도대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협약의 큰 구성요소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차 도입 여부를 생산성과 연동하여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는 한국 GM의 행보에 대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조] 2018년 한국 GM 지원 주요 내용

지엠본사	28억 달러 부채 출자전환
	8억 달러 대출 직후 출자전환, 퇴직 위로금 용도로 활용
	28억 달러 회전한도대출 지원 약속. 2020년 말 2440여억원 처음으로 차입 이루어졌으나, 2021년 2월 26일자로 전액상환
	금리 3% 중반대로 인하
산업은행	7억5000만 달러 출자
	비토권 회복
	지엠 5년간 자본매각 제한, 이후 5년간 35% 이상 보유

5. 결론

현재 한국 GM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GM의 수익성 전략에 따른 투자 결정에 한국 GM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투자의 규모는 물량 확보와 직결되므로 노동자들에게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조건 양보가 지속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한국 GM의 수익성-노동조건 양보 연계 전략의 큰 축을 차지하는 낮은 수익성 부분은 급여를 통해 설명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전가적 조작 의혹이 규명되어야 함에도 한국 GM은 관련된 정보 공개 등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 기업이라는 조건은 한국 GM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통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적인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경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외투기업의 문제점

김득중 | 쌍용자동차지부장

1. 외투기업 매각 경과.

-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매각.
- 2009년 법정관리.
- 2011년 인도 마힌드라로 매각
- 2020년 12월 회생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지원 (ARS) 신청
- 2021년 4월 법정관리.
(국내·외 판매 악화, 마케팅 비용 증가, 신차개발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침체 등의 원인으로 신청.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2. 두 번의 외투기업으로의 졸속적인 매각.

1) 중국 상하이차.

- 2005년 1월 5,909억에 상하이차로 매각.
(5,909억 중 1,200억 원 제외하고는 국내 자본으로 조달 4,200억 원은 쌍용차 자금으로 상환, 공적자금 1조 원과 금융 지원 2,000억 원 투입한 쌍용차를 중국에 헐값 매각)
- 1조 2천억 원 투자, 단협, 고용승계 보장, 30만대 생산 약속 불이행.
- 2007년 정규직 470명, 비정규직 500명 인력 축소.
- S-100 카이런 개발비의 1/10인 240억 체결, 현지 생산함.
C-200 프로젝트 1,200억에 비밀리에 계약

- 2009년 1월 법정관리 신청.
- 6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을 포함한 3,000여 명 정리하고.
- 법정관리 기간 내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다 법정관리 졸업(회생 계획 인가) 직후 15:1 감자조치. 2010년 그 후 주가 떨어 때마다 대규모로 주식 매도, 상하이 차는 끝까지 차익 실현하며 철수함.

1) 인도 마힌드라.

- 2011년 1월 인도 마힌드라 매각. (5,225억 원)
- 판매물량 증대, 재료비, 비용 절감, 제품개발 및 자금지원 약속 지켜지지 않음.
- 두 차례 유상증자 1,300억 전부, 신차개발 등 지원 없었음. 그런데도 재료비와 원료비 급격히 증가함.
-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공동개발 엔진 대부분 마힌드라를 위한 것, 2016년 티볼리 플랫폼을 550억 헐값에 가져가 라인업 확대, 인도에서 XUV300 (티볼리)와 알투루스G4(렉스턴G4) 이름으로 마힌드라 전체 판매량의 20% 차지 쌍용차 부분의 매출액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인도 현지 생산)
- 티볼리 파생 차량을 인도 마힌드라 브랜드로 유럽에 출시 예정.
- 2019년 12월 마힌드라 2,300억 투자 발표에 따른 노/사 선제적 자구안 추진 (복지중단, 상여금 200% 반납, 수당 반납 등 1,000억 원)
- 2020년 사무관리직 6개월 순환휴직.
- 마힌드라 인수 후 10년간 적자(2016년 제외)
- 상반기 마힌드라그룹 기업의 경영상태 3개 등급(ABC) 분류 (수익성 불확실한 C등급은 철수 결정, 쌍용차 C등급 포함)
- 2020년 2,300억 투자 및 대주주 포기, 매각 추진.
구로, 서부산 정비사업소 2,000억 헐값 매각. 해외채권 변제로 대부분 사용.
- 작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결정, 법정관리 내내 최대 주주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 상하이차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700억을 빌려준 채권과 이후 쌍용자동차 74.65%의 지분매각 대금을 고려하면 수천억 투자금 회수도 가능함.
- 2021년 4월 법정관리 돌입 -> 정용원 쌍용차 전무 관리인 선임-> 한영회계법인 6월 10일 조사보고서 제출 =>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작성) =>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 2021년 1월~ 4월 임금 50% 지급 유예 및 2020년 임금 동결과 복지중단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노/사는 공개 입찰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 고수.
- 매각 직전까지 갔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재매각까지 일정한 조정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투자처가 인수의향서를 내지 않은 것은 값을 깎는 구조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결국 선제적 자구안과 구조조정이 초반부터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보임.

3. 소결

- 정부의 주도하에 두 차례의 해외매각 등에서 쌍용차 인수에 나선 자본(상하이차, 마힌드라)은 어김없이 쌍용차 역량을 빨아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술과 플랫폼, 차량(기술)만 빼가는 일만 벌여온 것으로 확인, 더는 줄속적인 매각은 안 됨.
- 외환위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후 수많은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가 부각 되고 있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외국자본의 유치만을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매각과 특혜만 있을 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은 전무한 상황임.
- 결국 경영위기 때마다 그 책임이 대주주(상하이차, 마힌드라)와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마힌드라가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튀 행각을 넘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 협상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영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산업은행 이동걸회장은 마힌드라와 경영진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흑자 시까지 무쟁의 서약서’ 요구로 반노동, 반헌법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
- 이미 두 차례 정부의 주도로 매각 경험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내 산업과 기술, 일자리 보호라는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를 떠나 오히려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우려를 가 지고 있음.
- 기술 유출, 무 투자 전략으로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외투기업의 먹튀 차단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감시와 규제, 제도 정비가 시급함.

금속노조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DSSK) 관련 현황

윤준호 | 경주시부 다이셀지회장

다이셀 자본은 100여년 전 일본군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우리나라 144명의 노동자를 현지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킨 전범 자본입니다.

2016년 3월 기준 종업원 1만여명 매출액 5조여원 경상이익 7000여 억원 75사(자회사 58개)가 있으며 일본 본토를 주요 거점으로 하여 경북영천과 중국의 장쑤성을 비롯하여 ,태국,폴란드,미국 5개주, 이번에 인도까지 많은 거점들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다이셀은 2011년 11월 29일 경북 영천 자유경제 구역(채신공단)에 에어백 인플레이터 공장을 설립 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DSSK) 받은 혜택

- 부지 1만2천여평 10년간 무상임대
-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 취득세 15년간 면제
- 노동 분쟁시 갑(지자체)은 을(다이셀)과 종업원간 분쟁을 협력한다
- 총포 화약법 관련 (국내기업 한화는 관련법으로 사업 철수)

사측이 자료를 공유 하지 않기에 언론 보도 근거로 작성

이를 발판 삼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DSSK) 연 매출(회계시작 월 4월)

- 2013년 851,811,685원(8억5천)
- 2014년 1,305,622,272원(13억)
- 2015년 17,540,023,072원(175억4천)
- 2016년 24,746,278,831원(247억4천)
- 2017년 26,943,664,195원(269억 4천)
- 2018년 35,000,686,909원(350억)
- 2019년 43,476,196,987원(434억 7천)
- 2020년 45,798,124,997원(457억 9천)

하지만 다이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 18년 이전 상여 600%, 만근수당 10만원(연차 사용시 미지급), 근속수당 5만.10만, 호봉
- 2018년 시급 최저시급 인상률 적용 / 호봉제 격차 완화
- 2019년 시급 동결(삭감 과정 문제로 소송중 1심 노동자 승소 판결)
상여금 600%(3,6,9,12,설, 추석 100%지급)→450%(월 분할 지급,통상 임금포함)
- 2020년 시급 동결 / 생산성향상기금(파업 미참여 사원 1일당) 37,000원
- 2021년 시급 60원 / 일시금 30만원

입니다. 거기에다 노사 관계 또한

- 2014년 상당히 원만한 관계 (당시 사원들 대부분 관리자급 승급)
 - 2015년 매출과 물량 증가로 많은 노동자들 입사
 - 2016년 현장내 관리자들 갑질로 인한 이직률 상승
 - 2017년 라인증설,근무조 증설,이직률 상승(40%,대부분 현장노동자)로 인해 입사자증가
- 이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영천시)
- 2018년 오오마에 요스케 사장 부임 후 원가 절감 강요, 노사갈등 고조

- 2019년 4월 3일 금속노조 설립, 노조 인정 후 교섭 진행 하였으나 교섭 해태로 인해 9월 77일간 파업돌입, 11월 관리자 중심 기업노조 복수노조 설립
 - 2020년 창구단일화 중앙노동위원회 확정 통보 10일 만에 임단협 마무리, 5월 1년을 넘은 금속노조의 독촉으로 사무실 설치(노조 당 컨테이너 2동) 이후 기업노조와 단독으로 대화와 소통을 진행하고 모든 내용은 기업노조와 이야기 하라 하여 노노갈등을 부추김
- 관리자 위주의 기업노조는 업무일정 변경 근로조건변경(임금)등 당연한 부분도 금속에게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2021년 사측은 기업노조와 임금 협상에서 컴플라이언스 확보 전제로 21년 임금 협상을 완료 하였고 이에 금속노조는 사측의 규정,규약,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송,진정등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상여금무단 삭감, 휴게시간, 휴게공간, 통근보조비, 승진승급, 노사협의회 미이행, 산안위 미이행, 산안법 위반사항)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 철수 요인

- (1) 다이셀은 혜택이 끝나면 철수 한다는 소문 설립 당시부터 공공연히 나옴
(노조 설립 할 경우 철수 한다는 소문 함께 퍼짐,지역 주민들까지 소문)
(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는 고용불안을 활용 하여 기업노조 정당성 고취)
- (2) 금속노조와 교섭 초기 사측대표 모두 발언에서 본인의 임무는 다이셀의 한국 거점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미달시 사업 철수 하는 것이 본인 임무라 이야기함
(지속적인 사업철수 내용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여 노동자를 더욱 몰아냄)
- (3) 사측에서 이문이 남으면 혜택을 나누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벌써 10년이 지난 상태
- (4) 지자체에서 받은 혜택들 하나씩 끝나가는 상태
- (5) 회사는 이문이 남지 않으면 원가절감이 우선이라 판단 되지만 화약을 포함한 중요 부품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 (6) 19년,20년 경영분석 의뢰 결과 자금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으며 회계 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

- (7) 회계담당자가 DSSK는 O포인트 회사라는 말을 한적이 있음
- (8) 다이셀 본사는 중국과 일본등 한국 주위에 공장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물량을 이동 하여 물량 감소가 용의함 (일명 라벨 같이 하나면 끝)
- (9) 주 고객사인 현대모비스에서 미국 ARC사와 합작 인플레이터 공장 21년 3월 기공식(국내 독점화 제동)
- (10) 사업 철수 결정시 제재방안으로는 기업노조 단협 41조 (조합승계) 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노력한다 가 전부인 상태

다이셀 자본 철수시 문제점

- (1) 현 시점 다이셀의 150여명의 근로자와 그의 가족과 식당을 비롯한 협력 업체들이 한순간 실업자로 전락 할 수 밖에 없음
- (2) 철수 이후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다시 철수 할 수 있는 조건임
- (3) 이런 방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먹튀 자본이 될 수 있다 판단

다이셀 자본의 철수는 막지 못해서 다이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된다 하여도 다시 이런 상황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어 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케이츠, 산연이 드러나 있으며 다음은 다이셀이 될 것이고 머지 않아 다시 다이셀이 될 수있으며 그 사이 한화처럼 한국기업은 쓸 자리를 잃게 될 것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 그룹의 한국 3사 〈노조 탄압 및 국부 유출 논란〉

김성대 | JT친애저축은행지회장

1.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 그룹의 한국 금융권 진출

J트러스트 그룹은 2011년 3월에 대부업체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인수한 후 2012년 10월에는 (구)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여 (JT)친애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소매금융업에 진출한다.

이어서 2015년 4월에는 SC캐피탈과 SC저축은행을 패키지로 총 약1,510억에 인수하면서, 한국에서 총 4개의 법인을 운영.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역대 최대 이익 달성에 힘입어 한국 내에서의 이익이 일본내 J트러스트 그룹의 이익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 J트러스트 그룹의 노조 탄압

J트러스트그룹 (전)대표이사 에구치 조지와 노조 담당 부장은 사무금융노조 소속 3사 노조를 관리, 탄압하기 위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① JT친애저축은행지회

- ▶ 2014년 초 일본경영진 치바 및 에구치 이사로 인해 노조 설립 무산.
- ▶ 2015년 4월 24일 JT친애저축은행지회 설립
 - 억압적 노사 문화, 업계 최저의 임금 및 복지 개선, 연봉삭감형 인사평가제 폐지 등을 위해 노조 설립
 - (위 일본경영진 2명은 지회의 설립으로 회사가 추진 중인 근로조건 개선이 모두 중지되어 그룹 3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지 글 게시)

- 2016년 3월말 지회는 10일간 총파업 실시
타임오프사용자의 인사평가, 노조가입 범위, 노조사무실 본사 설치 쟁점.
(회사는 노조의 총파업이 절차 상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조위원장 포함 총 17명에게 3억원 손해소송 제기 2017년 4월 1심 사측 패소)
- 2016년 6월 ~ 12월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타임오프사용자인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인사평가 최하위 D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삭감 하려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함.
- 노조 설립 후 2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17일에 첫 단체 협약 체결.
단, 피켓팅 및 교섭 결렬, 쟁의행위 시에 타임오프 상실 및 노조사무실 반환 조건.
- 2018년 4월 승진한 조합원 11명은 승진 시 증가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사측은 소송 제기는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3천만원 손해소송 제기)
2019년 11월 1심 노조 승소 , 그 결과 회사는 승진 인상액 지급 및 승진 임금 개선.
- 2021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진행 중
쟁 점 :
 - 노조사무실 본사 설치
 - 노조 설립 후 5년 동안의 인사평가 결과 조합원들은 해마다 저평가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에 비해서 임금 상승 및 승진이 낮은 불이익 문제
 - 최근 5년동안 조합원들은 총 20%가 넘는 임금 상승이 있었지만,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4~ 5% 상승에 그치는 불이익 처우 문제.

위와 같이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인사 저평가로 인해 임금 및 승진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탈퇴와 이직으로 인해, 노조 설립 초기 조합원 320명이 넘는 과반수 노조에서 현재 조합원 120명에 불과하는 소수 노조가 되어 노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② JT저축은행지회

2015년에 J트러스트는 전문노무부장 및 노무사를 고용하고, 3사의 모든 교섭에 참석 및 노조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매달 3개사의 조합원 증감 현황을 파악해 조합원이 증가된 계열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통제 했음. 이로 인해 소수 노조가 됨.

(CCTV를 통한 지회장 동태 파악, 신인사평가제를 강요하며 조합원 무더기 저성과자 분류하여 임금 삭감,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개입 등)

③ JT캐피탈지부

노조 간부를 회유하여 계열사로 이직시키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이유없이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통해서 노조 탄압이 지속되었음. 이로 인해 전 지부장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3.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 그룹의 국부 유출 논란

J트러스트는 동남아 국가 투자 실패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룹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동남아 법인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을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JT친애저축은행은 서민 예금과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2년 연속 고배당을 통해서 일본으로 국부를 유출하고 있음.

① JT친애저축은행의 고배당을 통한 국부 유출

JT친애저축은행은 2012년 10월 설립 후 201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983억에 달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업계 대비 약 30 ~ 40% 정도가 열악한 업계 최저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타행 대비 직원의 인건비를 해마다 수십억원 절감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함. 해 마다 수백억원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국내의 사회 공헌 활동에는 인색함.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져 2017년말 임직원이 608명에서 2020년말 484명으로 불과 3년만에 직원 124명이 줄어, 남아 있는 직원들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할 정

도로 노동 강도가 높아 졌음.

하지만 국내에서 서민 예금과 대출 그리고 한국 노동자의 임금 절감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코로나로 인해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체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추라고 권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당하여, 국부 유출 논란을 일으켜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음.

- ▶ 2020년 5월에 2019년 당기순이익 314억 중 57%인 282억 배당
- ▶ 2021년 3월에 2020년 당기순이익 409억 중 24%인 100억 배당

②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매각을 통한 국부 유출

▶ JT저축은행 우회 매각을 통한 매각 차익 극대화

- 2020년 6월 J트러스트는 JT저축은행 매각 발표
SC저축은행을 약500억에 인수하였으나 5년만에 매각 금액이 약1,500억 전후로 예상되어 약1,000억의 막대한 매각 차익이 발생하여 국부 유출 현실화.
- 2020년 10월말 홍콩계 자본 VI금융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
- 2021년 3월말 J트러스트는 VI금융투자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및 매각 결렬 선언
사모펀드의 우회 인수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불발로 추정
- 2021년 4월 1일 J트러스트는 VI금융투자에게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 동시 매각하는MOU체결
- VI금융투자는 JT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과 배당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배당과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JT저축은행의 최근 당기순이익의 3/4에 해당되는 금액 임. 이와 같은 VI금융투자의 계획은 서민의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투기자본의 이윤으로 전락 할 것임과 동시에 JT저축은행의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태롭게 될 것임.

③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 그룹의 JT캐피탈 인수 및 경영의 문제점

일본경영진은 JT캐피탈 인수 초기 JT캐피탈을 3사의 지주회사로 상장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인수 후 대출 자산 매각과 배당을 통해 회사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악화시킴.

이는 캐피탈 업계의 특성상 영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투자가 필수 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당을 함으로써, 회사를 발전 시키기 위해 캐피탈을 인수 한 것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 만을 위한 인수임이 증명된 것임.

즉 업계 인지도가 높았던 SC캐피탈을 J트러스트가 인수함으로써 회사 존립이 위태롭게 됨.

- 2014년말 자산 약 1조 2천억, 임직원 221명
- 2015년말 자산 약 4,150억
인수 후 SC금융지주로부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총 자산의 2/3의 매각
 - 2015년, 2016년 영업점 12개 폐쇄 및 통합
 - 2016년 J트러스트에 100억 배당
 - 2018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영위비율 위반으로 과징금 1억 및 대표이사 경고 조치로 대표이사 사임.
 - 2020년말 자산 약 5,500억, 임직원 121명으로 최초로 적자 전환.
 - 2021년 5월 14일 VI금융투자사로 JT캐피탈을 1,165억에 매각하는 계약 체결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제 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방향

권오진 | 금속노조 정책부장



[제안]

외투기업의 자본 유출 및 문제점

권오진 | 금속노조 정책부장

-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국내 기업 중 외투기업의 숫자는 적지만 국내 매출의 10%,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며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제조업 외투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OECD 평균보다 투자규제가 낮은 영향도 있습니다. (FDI 규제지수 : [제조업] OECD 0.02, 한국 0.0)
- 주로 외투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이유는 양질의 노동력, 안정적 국내시장확보, 아시아 시장 등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 등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투기업들은 외투기업만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외투기업은 국내 진출 시 MOU를 체결하며 신규 투자, 신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을 약속하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정규직은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고용 유연화 전략, 국내 인수기업의 핵심 기술탈취, 투자 불이행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 외투기업의 핵심적 문제점

1) 핵심 기술 탈취로 인한 이전가격 문제, 생산 하청 기지화

- 국내 인수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 본사에서 탈취하여 인수기업의 기술자립을 무력화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던 핵심부품을 해외(본사)에서 고가에 역수입 / 국내에서 반제품을 헐값에 본사로 수출하고 본사는 완제품화하여 고가에 판매
- ⇒ 이윤은 본사가 챙기고 인수기업의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이전가격 문제 / 매출 조작에 따른 탈세) 형성

- 이로 인해 국내 부품사와의 벨류체인이 붕괴되고 자립성을 잃은 인수기업은 점차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

2) '집권적 분산화' 방식의 경영관리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사, 투자, 생산, 판매 등 핵심 사항은 모두 본사가 결정하고 지사의 경영진은 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적
- 이로 인해 노사 간 교섭이나 현안문제가 발생 시 현지 경영진은 권한이 없다고 발을 빼고 본사는 지사의 문제는 지사에서 해결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겨 노사 간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

3)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 고용 유연화

- 외투기업은 보통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데 이들은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 유연화, ERP(인사, 노무, 생산 등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노조 탄압을 진행함. 본사 차원에서 노동조합 파업 시 해외 대체 생산을 통해 파업 무력화를 진행
- 노사갈등 증폭, 투쟁 장기화 등 노동자의 고통 가중

4) 이윤의 과도한 해외유출과 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구조적(의도적) 부실화

- 본사는 지사에게 ① 주요 핵심부품을 고가에 팔고(이전가적) ② 연구, 영업, 물류 등의 계약으로 각종 수수료를 챙기고 ③ 수익이 발생하면 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지사의 사내 이익금을 과도하게 해외(본사)로 유출
- 이로 인해 지사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자금의 부족으로 장기적 안정성이 악화되고 구조적(의도적)으로 부실화가 심화

5) 일방적 자본 철수 및 철수 협박을 통한 고용 유연화, 혈세 지원

- 본사는 지사의 사내 이익금을 과도하게 해외(본사)로 유출하여 지사의 매출이 올라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의도적)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자본 철수를 하거나 자본 철수 협박
-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게는 구조조정 등의 양보, 정부에게는 자금지원 등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

2. 외투 완성차 상황을 통해 본 외투자본의 폐해 사례

1) 쌍용차

① 반복되는 졸속 매각과 기술 먹튀

-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매각
- 2009년 법정관리
- 2009년 상하이차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엔진 기술 등 유출 혐의로 쌍용차 임직원 7명 기소
- 2011년 인도 마힌드라로 매각
- 마힌드라 매각 이후 수출 급락(해외 판매 전략 부재), 연구개발비 급등(11년~18년 8년간 1조 3천억), 지속적인 적자
- 개발비는 쌍용차가 결과물은 마힌드라가. (국내에서 쓰지도 않는 1.2L, 1.6L 엔진을 개발해 마힌드라가 가져감. 티볼리의 플랫폼을 헐값에 가져가고 인도에서 4만 대 생산 판매)
- 마힌드라 2,300억 투자 약속해놓고 코로나 핑계로 약속 파기,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하며 법정관리로 몰고 감

② 누구의 책임인가?

- 상하이차 때 기술 먹튀를 확인하고도 외교 문제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정부. 그로 인해 계속 반복되는 기술 먹튀
-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본사의 기술 빼가기를 막기는커녕 도와주고 경영실패로 수출시장도 빼앗긴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진
- 혈세를 지원하고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또다시 졸속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
- 두 번의 매각과 투쟁. 노노갈등으로 삶이 피폐해진 노동자

2) 한국지엠

① 이윤의 과도한 본사 유출과 그에 따른 한국지엠의 부실화

-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연구개발 법인 분리로 인한 용역체결로 연구개발비 2배 가까이 상승)

- 이전가격 문제로 세금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 막대한 본사 차입금으로 인한 고금리의 이자 비용
- 쉐보레 유럽·러시아 철수 비용 떠넘기기

② 독립된 완성차에서 하청기지로 전략

- 한국지엠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던 연구소를 GMTCK로 법인 분리 후 용역계약
- 완성차의 손발인 해외 판매망 매각(유럽, 러시아, 베트남)
- 군산공장 폐쇄
- 물류창고 통폐합, A/S 외주화

③ 구조적(의도적) 부실화와 자본 철수 협박, 혈세 지원

- 고용을 빌미로 한 자본 철수 협박으로 산업은행에서 8,100억 원 지원받음
- 군산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등으로 연간 8,000억 원 정도 비용 절감
- 혈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평 2공장에 대한 23년 이후 신차배정이 없는 상황이며 구조조정도 지속
- 23년 부평 2공장에서 군산공장의 사태가 반복되어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나 산업은행은 방관하는 상황

3) 르노삼성

① 구조적 하청 기지화

- 삼성자동차 출범 직후 IMF 금융위기로 2000년 르노에 매각됨. 당시 생산공장 1개와 약간의 국내 판매망이 전부였음. 자체 기술 전무(닛산과 기술제휴로 대부분 닛산 베끼기)
- 인수 후부터 르노의 해외생산기지로 전략. 본사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물량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

② 본사의 캐시카우로 전략과 르노삼성의 부실화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전가격으로 이윤을 본사로 빼감. 이로 인해 매출은 오르는데 영업이익은 급락. 이전가격 문제로 2013년 세금 추징됨
- 이전가격 세금추징 이후 전략을 바꿔 해마다 과도한 배당을 진행하여 르노삼성의 현금보유는 바닥임

③ 구조적(의도적) 부실화 심화

- 기존 설비 감가가 대부분 끝난 시점이라 추가투자가 필요하지만 캐시카우 역할로 인해 르노삼성 자체는 돈이 없음. (자체 투자 여력이 없음.)
- 위탁물량 계약종료와 수출 하락이 맞물려 물량이 급감함. (본사가 수출 물량 배정의 목줄을 쥐고 있음.)
- 르노는 이미 생산 기지화. 엄청난 노동강도에 많은 이익을 냈지만, 이익은 프랑스로 현장은 물량 걱정. 상시적 구조조정 가능

4) 기타 사업장

- 발레오 공조 : 08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09년 일방적으로 청산. 그러나 국내 영업 판매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제품을 동일 원청사(르노삼성 등)에 납품
- 오리온 전기 : 미국계 펀드 MP는 인수 8개월 만에 회사 분리·청산 함. 인수 당시 고용승계와 3년간 구조조정 금지를 노사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1조 3,000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결국 1,300명 노동자 해고
- 파카한일유압 : 중·대형 굴착기용 유압 밸브 기술을 노리고 인수. 타 법인으로 국내와 해외에 생산공장을 지어 동일 제품을 생산하여 동일 원청사(현대 중공업 등)에 납품. 의도적 경영 위기를 빌미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문제 및 관리제도의 부제

- 외국인투자 촉진법 내용 거의 대부분이 외투자본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다수이며 폐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세금 감면
- 지방세 면제 및 감면 / 관세 감면
- ※ 법인세 감면은 2019년부터 전면 폐지

- 토지 지원
 - 공장부지 취득비 지원 및 임대료 최대 100% 감면
- 보조금 지원
 - 시설 건설비 / 장비 구매비 / 인건비 보조금
- 노동규제 완화(경제 자유구역에 한정)
 - 파견근로 기간·대상 등 규제배제 / 무급휴가 허용 등
- 연구개발 (연구소 및 연구 인원에 대한 지원)
 -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시 시설 투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감면
 -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부지 지원, 보조금 지원
 - 외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및 영주권 조건 개선
- 이윤 해외유출 보장
 - 외투자본이 국내에서 취득한 이윤을 자유롭게 해외(본사)로 송금 보장
 - 국내에 중대한 경제적 사정(외환위기)이 발생해도 외투자본의 (본사로) 외화 송금은 보장(외국환 거래정지 조항 예외 적용)

※ 기술·이윤 유출, 국내 기업의 부실화 등 외투기업의 폐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규제로 보지 않고 외투기업의 재생산을 유도하여 기업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고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봐야 함

4. 외투자본 개정입법 방향(안)

- 외투자본이 자본 철수가 용이한 근본 이유는 설비 감가상각이 다 할 때까지 이전 가격, 각종 수수료, 고배당 등으로 수익이 나도 과도하게 이윤을 해외(본사)로 유출하고 구조적(의도적) 부실화를 초래하여 자본 철수 협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구조조정을 하기 쉽기 때문임

- 따라서 외투기업의 이윤을 과도하게 빼가는 것을 제한하고 재투자를 하도록 강제하여 기업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이전가격 규제 및 국내 부품사와 계약 시 인센티브 제공

- 내부 거래를 통한 이전가격 조작은 국내외투기업의 경영실적을 악화시키고 국내 협력 부품사의 생태계를 망가트리는 역할을 함
- 이전가격 조작을 강력히 처벌할 규제와 함께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내 부품사와 계약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효과를 배가하고 국내 외투기업과 부품사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 마련

2) 주주 배당 한도 제한(해외송금 한도 제한) 및 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 외투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헐값에 국내 생산설비를 구매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비가 다할 때까지 빼먹고 철수하는 방식 주로 활용. 이 방식대로라면 재투자할 이유가 없음
- 주주 배당 한도 또는 해외 본사 송금 한도액을 제한하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재투자 과세 (국내법 : 투자·상생 협력촉진세 참조)를 하거나 국내에 재투자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본 철수의 위험을 낮춤
- 이미 올해 2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의 인정기준을 미쳐분이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개정되었음

3) 핵심기술 보호 및 먹튀 방지를 위해 인수 시 신규 투자 강제 및 일정 기한 사업 유지 강제

- 인수 당시 생산 및 개발 중이던 상품에 대해 우선 국내 생산 및 해외 생산 시 적정 로열티 지급(개발비 대비 최소비용 제한) / 통합 개발 시 일정 생산량(몇%) 우선 배정 등
- 금융자본이 인수하여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통해 폭력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리고 2~3년 이내에 재매각하거나 신규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과 자산을 모두 빼가고 단기 청산을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인수 시 신규 투자 강제 및 일정 기한 사업 유지 강제

4) 신규 고용 창출, 신기술 도입, 신규 투자 등 인수 당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인센티브 취소, 철회, 환수 등 법제화

⇒ 20년 시행령이 개정(제 20조의 4)되었지만 현금 지원 환수에 한함. 토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신규고용 창출, 신기술 도입, 신규 투자 등의 약속을 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받아 놓고 약속을 미이행 시 인센티브 강제 환수조항을 마련하여 계약이행 강제

5) 외투기업의 경영관리·감독 및 노동자의 고용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정 지분 참여 및 노동이사제 등 감시·견제 장치 도입

- 노동자와 정부의 상시적 경영상황 감시 및 산업은행 등의 관리·감독 의무화 강제

memo

memo

memo

memo